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 권고안 확정

# 혁신없고 높은 기여금만... '제2 타다' 없을 듯

내년 4월 플랫폼 운송 사업시 매출액 5% 수준 기여금 징수

차량 100대 미만때만 2년 유예  
"플랫폼 운송 시작작업 없을 것"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이 더는 활성화되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기 자본이 부족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도약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매출액의 5%를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초기 스타트업의

구분	200대 미만	200~299대	300대 이상
기여금 제도			
①매출액의 5%			
②운행횟수 당 800원			
③허가대수 당 40만원/월 중 사업자 선택			
허가대수	200대 미만	200~299대	300대 이상
부과율	25%	50%	100%
①정률(매출대비)	1.25%	2.5%	5%
②운행 횟수당	200원	400원	800원
③대당 정액	10만원	20만원	40만원
허가제도			
허가기준 플랫폼,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정비·세차 등 구비			
사업용 번호판(황색) 부착			

자료: 국토부 뉴시스그래픽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스타트업 간담회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고안에서 면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보유 차량 1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게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는 것이 기본이다. 운행회수당 880원, 월정액 40만원 중 선

택해 변경도 가능하다.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플랫폼 운송사업자 총량 상한도 정하지 않아 논란이다. 권고안을 통해 총량 상한을 정하는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직접 심의를 통해 총 허가대수를 관리 한다는 입장이다.

이 권고안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운송"에 뛰어든 스타트업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은행 횡수 당 기여금이 300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매출액에 비해 기여금도 커져 성장할수록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건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아예 투자자들에게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플랫폼 택시 총량의 경우 유연한 증차가 핵심인데, 권고안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심의위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 수요에 따른 총량 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량 공유업체 쏘카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쏘카는 지난 3월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경상후자 102억 弗 2년만에 최대 달성

9월 수출 499억 달러, 8% 증가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이 효과 노릇을 했다. 주요국이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반도체와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당초 전망치인 540억 달러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수출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작년 흑자폭인 600억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02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흑자가 이어진 것은 물론 흑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 2018년 9월 112억4000만 달러 이후 딱 2년 만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덕분이다. 9월 수출은 498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했다. 작년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반도체(12.4% ↑)와 화공품(16.0% ↑), 승용차(24.3% ↑)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수입 역시 37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오름세를 기록했다.

수출의 증가폭이 수입을 앞지르면서 수출입 차익인 상품수지 흑자는 9월 120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인스타 등 SNS 기반 쇼핑몰 상반기 피해 657건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동기대비 39%, 184건 늘어  
미배송 48%, 청약철회거부 20% 등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및 패션 물품 구매가 늘면서 브랜드 사칭을 비롯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상품미배송 등의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 플랫폼인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의미한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얼마전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

<2020년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피해유형별 현황>

구분	건수(비율)
상품미배송	318(48.4%)
청약철회 거부	128(19.5%)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98(14.9%)
품질하자	94(14.3%)
기타	19(2.9%)
계	657(100.0%)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벤'을 사칭한 사기 사이트가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보가 울린 바 있다. 해당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유명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유사했고 25만~30만원 선에 판매되는 오리지널 브랜드의 선글라스가 한화로 약 4만5000원에 올라와 있었다. 저렴한 가격에 혹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피싱 사기 사이트'에 당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까지인 올해 상반기에 당국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인 184건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하면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그밖에 '품질 하자'의 이유도 약 14%에 달했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이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스로 제도(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

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서 불량품이나 위조품이 유통되는 것은 전반적인 유통 생태계의 신뢰 문제"라면서 "소비자 스스로 지식과 윤리 수준을 높여 비윤리 행위를 퇴치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사이버조사단 등이 활동하고는 있지만 광활한 사이버 영역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관해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스마트 감시단이 필요하다"면서 "유통업계는 윤리강령을 제정함과 동시에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자를 인증하며 구매자 보호프로그램을 통한 철저한 거래 관리로 사기율 제로화를 구축하는 커머스 플랫폼 인공지능 '디비디비' 등이 점차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SK바이오팜

## 뇌전증치료제 사용승인 국내 의료현장에 투입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 국내 의료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30일 2명 이상 환자의 부분 발작에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냈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선 허가받아 지난 5월부터 판매 중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임상 3상시험 중이다. 지난 9월 9일 식약처에서 3상을 승인받았다.

부분 발작 시험자를 대상으로 세노바메이트보조요법의 유효성·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이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도 1상과 3상을 승인받았다. 일본에서도 임상을 추진 중이어서, 승인 시 아시아 3개국 환자 500명 대상 동시 3상이 진행된다.

세노바메이트가 공급되면 치료 옵션이 다각화된다. 뇌전증은 한가지 약물로 조절이 쉽지 않아 여러 치료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월성1호기' 압수수색

檢, 산업부·대구 가스공사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들 지역에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

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타당성 논란의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단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전기 판매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 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